

##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

### 새누리의 진단

- 현행 복지제도는 개인·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음.
-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복지 지원 필요

### 새누리의 약속

- 산재보험 수준의 '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' 제도 도입
- 농어촌 실태에 부합되도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
- 마을경관 가꾸기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
  - 농어촌 출신 산업기능요원이 영세 고령농 일손 돕기
  - 농지연금 담보가치 산출기준을 현실화
-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 확대
- 농어촌 고령자 복지기반을 맞춤형으로 확충

### 새누리의 실천

-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보험료 50%이상 지원
-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(79만원)을 상향 조정, 건강보험료 경감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및 관련 법령 개정

## 농어촌의 주거 · 의료 · 교육 여건 개선

### 새누리의 진단

-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36.2%, 군 지역 병 · 의원 분포비율 11%,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농어촌 거주자의 주거 · 의료 · 교육 등 생활여건이 도시와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
- 농어촌 관련 여건개선 관련 기관이 국토해양부 · 보건복지부 ·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분산되어 개별 사업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 등과 같은 비효율성이 발생

### 새누리의 약속

- 읍 · 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
- 농어촌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공동급식시설과 도우미 지원
-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료 인프라 확충
- 소규모학교를 연계하여 농어촌 통합 교육 활성화
- 농산어촌지역 고교출신자에 대한 장학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채용 확대

### 새누리의 실천

- 태스크포스(task force)를 구성하여 부처간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

##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

### 새누리의 진단

- 2008년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짐.
- 특히 여름철 고온, 가뭄으로 인한 곡물 수확 감소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

### 새누리의 약속

- 식량안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
-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확대
- 해외 식량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 물량을 상시 비축
- 수산자원 개발을 확대하여 식량자급률 제고

### 새누리의 실천

- 해외 농업 적극 지원방안 수립 추진

##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

### 새누리의 진단

-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,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단순생산에서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신성장동력화 필요
- 이를 위한 IT·BT 연계 활용, 농어업 관련 R&D 투자 확대, 종자·생명산업 육성, 농어업과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연계 노력 미흡
- 친환경적인 자재 생산·활용과 재배방식 적용 요구

### 새누리의 약속

- 농어가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IT와 농림수산업의 융복합화 추진
- 농림수산물 예산의 10% 이상을 R&D에 투자
- 농림수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완성하기 위한 영농후계자 양성 체계 구축
- 세계일류의 첨단 식품산업을 육성
- 친환경 농림수산업의 생산·유통기반 구축과 도시농업 육성
- 축산분뇨의 고품질 비료화를 위한 '공동자원화시설' 적극 지원

### 새누리의 실천

- 농어업 지원 R&D예산 확충 및 영농후계자 양성 체계 구축

## 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 및 인력부족 대책 마련

### 새누리의 진단

- 현행 고령 농어업 인력의 저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력 정책 요구
- 농어촌 고령화, 농어가 인구감소 등에 따라 현장의 농어업 노동력 부족 현상 심화

### 새누리의 약속

- 농림수산업 인력은행(외국인 노동자 활용제도 포함) 설립
- 인턴제도를 비롯해 창업농·귀농귀촌인 등에 대한 교육·지원 프로그램 확대
- '마을경영체' 등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

### 새누리의 실천

- 「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지원 법률」 제정
-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 변경

## 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기여

### 새누리의 진단

- 2011년 농어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9.1%로 1995년 95.1%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, 앞으로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
- 식량안보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쌀 생산기반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쌀 농가의 소득보전 필요

### 새누리의 약속

- 고정직불금을 현재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
- 농어업 재해보험의 확대 및 내실화
- 발작물 중 직불제 적용 품목을 현행 19개에서 대폭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발작물에도 적용

### 새누리의 실천

- 「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등 개정

## 비료 · 농약 · 사료 · 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 절감

### 새누리의 진단

- 원유,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료 · 농약 · 사료 · 에너지 등의 가격이 동반 상승
- 농업생산 투입비용 증가로 농어민의 경영부담 가중

### 새누리의 약속

- 비료 · 농약 · 사료 · 에너지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해당사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'징벌적 손해배상 제도'를 적용
- 농 · 수협이 농자재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여 구입 및 유통 비용 절감
- 사료 원료 곡물 구매시스템 개선
- 현재 250개인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확충
- 2013년부터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하여 고령 · 영세농을 대신 하여 농작업 대행 추진
- 농업경영비 절감 기술 적극 개발, 보급

### 새누리의 실천

- 관계부처 공동으로 '(가칭)농자재 공정거래 및 산업발전협의회' 운영
- 농어업용 투입자재 관련 조세제도 전면 재검토 후 지원방안 수립
-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「공정거래법」 개정

## 생산 · 유통 · 가공 · 외식 · 관광 등이 연계되는 6차 산업정책 확대

### 새누리의 진단

-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,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 · 가공 · 외식 · 관광 등 2차, 3차 산업으로 외연확대정책 필요
- 농어촌의 전통주 · 발효식품 등은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화 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나 농가의 판매용 전통식품 제조, 전통주 판매수량 제한 등에서 많은 규제가 존재

### 새누리의 약속

- 생산자조직 및 생협의 가공 · 외식 산업에의 참여 확대
-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전통식품 적극 육성
-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구매 확대 유도

### 새누리의 실천

- 품목위원회 설립 : 품목별 정책 수립, 집행
- 「식품위생법」 등 개정



##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

### 새누리의 진단

- 최근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3차례 연속해서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등 농어업재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음.
- 피해복구가 공공시설 복구에만 중점을 두고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과 복구는 민간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함에 따른 민원 지속 제기

### 새누리의 약속

- 농어업 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까지 50% 이상 확대하고,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
  - ※현재는 보험의 보장범위가 제한되고 보험금 급여 수준이 미흡할 뿐 아니라 피해조사 절차가 느리고 대형 재해 발생시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- 사후 복구지원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강화

### 새누리의 실천

-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 및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개정

## 수산업 환경변화를 감안한 수산업의 신성장동력화

### 새누리의 진단

- 수입 수산물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수급 지원 및 수산물 자주율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
- 기후변화, 해양오염 등 외부 생태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
- 풍부한 수산 환경 적극 활용 노력 미흡

### 새누리의 약속

- 국내외 수산물에 대한 검역·검사 강화
- 자연재해에 안전한 수산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연안의 아쿠아벨트화 복원
- 기술집약형·생태보존형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
- 내수면 종합개발 및 생태목장 조성
- 해외 수산물 생산기지 확보

### 새누리의 실천

- 수산관련 법령 개정
- 해외 수산물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기능 강화

## 미래 수산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수산물관리체계 구축

### 새누리의 진단

- 어촌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지만, 수산분야의 신규 인력유입 부진
- 해양환경 관리가 수산자원 보호·육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, 항만 등의 연계관리가 미미함.

### 새누리의 약속

- 해양수산부 신설
- 수산과 해양환경 업무의 통합관리
- 신규 유입 인력의 수산분야 조기 정착을 위한 어업허가제도 개선
- 후계어업인력 육성과 어선원 복지 향상 방안 마련

### 새누리의 실천

- 해양수산부 신설 관련 근거 마련
- 어업허가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 개선

##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

### 새누리의 진단

- 국토의 64%를 차지하는 산림과 도시 숲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부수적으로 산림소득 제고 가능
- 210만 산주와 임업인들의 산림소득 제고 정책방안 부재
- 산림자원을 통한 농·산촌 지역주민과 베이비부머의 제2의 삶터·일터 제공 가능 미흡

### 새누리의 약속

- 산림분야 일자리 관련 자격증 개발 및 자격제도 도입
-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
- 산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 및 경제적 가치 제고
- 도시녹화운동 전개
- 산약초 재배, 청정 임산물 생산 장려 등을 통해 임업소득 증대
- 목재산업 육성을 통한 목재자원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

### 새누리의 실천

- 산림분야 일자리 자격증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
-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자원 현황 파악을 위한 대규모 조사
- 목재자원 관리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수립

##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을 통한 녹색복지 구현

### 새누리의 진단

- 현재 추진 중인 산림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개별단위 위주로 추진되어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
- 산림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 필요
- 온실가스 감축이 범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UN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감축목표량 충당에 활용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시급

### 새누리의 약속

- 숲을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녹색 공간 또는 산림복지 공간화
- 산림재해별 체계적인 맞춤형 방지체계 구축
- 산림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일정부분을 충당
- 전국 숲에 청소년 수련장을 다수 구축하여 숲 교육 확대를 통한 청소년 문제 해결에 기여

### 새누리의 실천

- 숲의 복지공간화는 시범단지 운영 후 전국 확대 검토

## FTA 협상시 농어민의 권익을 최대한 배려

### 새누리의 진단

-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농어민의 피해의식 팽배
- 농어민,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 넓은 의견수렴 채널도 부족
- FTA 국내보완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, 농어민의 피부에 와닿는 대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

### 새누리의 약속

- 한중 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하여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
- 이미 발효 중인 FTA의 국내 대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농어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

### 새누리의 실천

- FTA 국내 대책의 사업별 성과평가 및 피해 모니터링 대폭 강화
- FTA 이행기금 조성을 연차별로 확대하고, 국가 전체 재정 증가율을 적절히 고려하여 농림수산물식품 예산 지원
- 농어촌에 대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14년 6월 종료 예정인 농어촌 특별세 기간을 10년 연장

##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

### 새누리의 진단

- 축산분뇨,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, 국민경제 부담 증가
-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의한 축산물 수입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시급
- 국제곡물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 경감 필요

### 새누리의 약속

-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
- 축산물 선진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
- 축사시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설현대화를 적극 지원
- 사료곡물가격의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장단기 사료가격안정대책 마련

### 새누리의 실천

- 공동자원화, 공공처리시설, 가축분뇨유통센터 등을 통한 가축분뇨이용 효율화
- 생산에서 도축·가공·유통·판매까지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체계 구축
- 축사를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 개축·신축 시 시설현대화 자금지원대상 지원 대폭 확대
- 저리 사료구입자금 지원 확대, 사료원료 무관세화 확대 및 국내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가격 안정대책 추진